

# 22억 삼킨 ‘엔터리 職訓’

〈인터넷 직업능력개발 훈련〉

■ 부정수급업체 현황

| 업종            | 업체수   |     |     |
|---------------|-------|-----|-----|
|               | 전국    | 광주  | 전남  |
| 어린이집          | 215   | 98  | 48  |
| 요양, 복지시설      | 185   | 101 | 52  |
| 건설, 건축, 시공업   | 118   | 51  | 34  |
| 제조업           | 117   | 57  | 34  |
| 플래이트 관리업      | 91    | 1   | 18  |
| 의료기관          | 84    | 41  | 10  |
| 도소매업          | 72    | 38  | 15  |
| 유통업           | 49    | 29  | 7   |
| 자동차정비업        | 31    | 13  | 12  |
| 정보통신 관련업      | 26    | 18  | 2   |
| 법무, 세무, 건축사무소 | 24    | 14  | 3   |
| 운수업           | 24    | 13  | 9   |
| 음력업           | 10    | 6   | 0   |
| 요식업           | 8     | 4   | 0   |
| 골프장운영업        | 4     | 0   | 4   |
| 호텔운영업         | 3     | 2   | 0   |
| 법무법인          | 2     | 2   | 0   |
| 기타            | 51    | 34  | 7   |
| 합계            | 1,114 | 522 | 255 |

지역 2개 업체서… 1114곳 위탁교육 부실  
노동부 허술한 감시·관리도 한몫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 정부 예산이 ‘눈먼 돈’처럼 취급되면서 민간 위탁 교육 업체들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열세가 줄줄 새는 데도 고용노동부의 감시·관리 업무는 허술했다.

◇2개 업체가 22억4000만원 챙겨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면서 엔터리 교육으로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위탁 교육업체 대표 정모(44)씨와 B업체 대표 이모(4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통해 어린이집·요양복지시설 등 전국 1114개 업체 직원들의 위탁 교육을 실시하면서 2535차례에 걸쳐 부실한 교육으로 훈련생들을 수료시킨 뒤 22억4000만원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교육비 때문에 재직자(근로자)들의 직업 교육을 기피하는 어린이집 운영자 등 사업주가 많은 점을 들어 대신 교육비를 낸 뒤, 엔터리 교육으로 정부 지원금만 챙겼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예컨대 전체 교육비가 10만원(정부 지원금 4만 원)일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돈(6만원)을 위탁업체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교육 대상 업체를 모집했고 엔터리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을 수료시킨 뒤 정부 지원금 4만 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공짜로 훈련을 시키면서 기관들은 정부 지원금만 고스란히 챙겨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셈이다.

엔터리 수료과정을 거친 종사자들이 일하는 업체는 어린이집 등 1114곳에 이르고 광주·전남에서만 777곳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2배(약 45억 원)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알아서 수료, 평가도 제멋대로 = ‘눈먼 돈’을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면서 교육 과정은 엔터리나 다를 없었다.

적발된 훈련기관은 대부분의 업체 직원들이 업무 등으로 인터넷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관리 시스템(LMS)에 최초 로그인만 하면 이후로는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학습한 것처럼 수입 진도율이 올라가는 기능과 관리자 기준(학습진도율 80%,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평가 점수를 조작할 수 있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모범과제물과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고 직접 해당 사업체를 찾아가 직원들의 대리시험도 치러줬다.

◇‘눈 먼’ 감시도 한몫 =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사업주가 자체 부담으로 직원들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한 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해당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고용센터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지만 매년 한 차례 실시된 감사는 서류에만 의존한 탓에 연례 행사에 머물렀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관리·감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검·경 미묘한 신경전

꽃뱀 사건 연루 경찰관 “사전